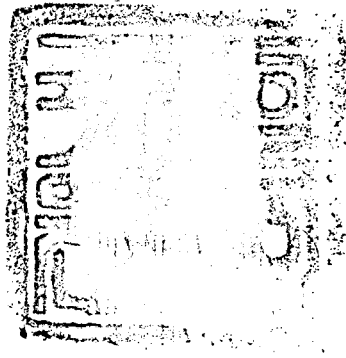


國統調 89-12-117

統一과 國家戰略

1989



研究責任者

李 度 珩 (朝鮮日報)

國 土 統 一 院

冊을 내면서

이 報告書는 國土統一院 政策調查研究事業의 일환으로 추진된 特殊課題 研究結果 입니다.

本 研究는 日本·中國 등의 國家形成過程을 통해 民族的 課題인 韓半島 統一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教訓을 추출하고 우리가 추구해 나아가야 할 國家戰略의 제시를 主內容으로 하고 있습니다.

關聯研究 및 政策樹立時 참고자료로 적극 活用되어 지기를 期待하면서, 아울러 여기에 收錄된 내용은 반드시 當院의 見解와 一致하는 것이 아님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1989. 12.

調 查 研 究 室

目 次

I. 國家戰略의 필요성	7
II. 狀況에 대한 認識	
1. 統一의 沮害要因들	13
2. 外的 영향으로부터의 탈피	27
3. 궁극적 統合을 위한 段階들	32
III. 南北韓이 合意해야 할 國家戰略	39

I. 國家戰略의 必要性

한 나라에게 國家戰略이 있고 없음은 개인에게 삶의 목표가 있고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어떤 목표나 설계없는 개인의 삶은 무의미할뿐만 아니라 위험하기까지 하다. 왜냐하면 목표없는 사람의 행동은 衝動的이며 변덕스럽고 무책임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는 개인과 똑같은 어떤 의미에서는 개인보다도 더욱 뚜렷한 목표를 가질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이 세우는 인생의 목표나 설계가 野心없이 있을 수 없듯, 국가의 목표도 한 나라의 야심의 표현이며, 이것을 국가전략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우리 민족은 그러한 야심을 갖고 있는가. 특히 오늘날 많은 挑戰속에서 우리가 維持·發展시키고자 하는 대한민국은 어떠한 야심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전혀 야심이 없는채 형편 당는대로 時勢에 맞추고 時流에 迎合하면서 정치없이 어디론가 흘러가고 있는 것일까.

여기서는 지금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떠한 목표를 지향해야 하는가를 주로 논해보기로 한다.

대한민국 創建당시의 憲法前文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恒久的인 國際平和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確保할 것을 결의……」 운운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도 대한민국 특유의 국가목표랄수가 없다. 물론 모든 국가는 헌법 전문 같은데서 국가적 목표나 야심을 분명히 明示하기보다는 그것을 은닉하고 그대신 매우 普遍的인 평화·평등·자유·행복등을 謳歌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대한민국은 그 創建過程부터 積極的인 의미의 국가목표를 設定했다기보다 消極的이고 受動的인 출발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6·29宣言 이후에 표면화된 소위 修正主義 학자들은 흔히 대한민국이 먼저 38선이남에 단독정부를 세움으로써 國土分斷을 고정화시켰다고들 한다.

그러나 실체는 정반대다. 1945년 8·15해방전 미군보다 한달이나 앞서 38선이북에 발을 들여놓은 소련군은 8월25일 평양에 司令部를 設置하고 첫 작업으로 북한각지의 建準(건국준비위원회=呂運亨·安在鴻등이 주동) 組織을 인민위원회로 개편시켰다. 이어 10월 8일에는 「북조선5도인민위원회 대표자회의」를 열어 連絡機構를 만들었고 10월 28일에는 「북조선5도 行政局」을 發足시켰다.

한편 1945년 9월 8일에야 인천에 상륙한 미군은 소련군보다 25일이나 늦은 9월 19일 서울에 軍政廳을 설치한후 10월 10일에는 建準을 기초로 9월 6일에 발족됐던 「인민공화국」을 정식으로 否認하고 軍政을 시작했다. 소련군은 실질적인 군정을 하면서도 「인민공화국」을 전적으로 拒否하지는 않고 그 하부조직을 占領行政機構로 改造했다.¹⁾

「인민공화국도 대한민국임시정부도 인정하지 않고 ‘조선총독부’의 관료기구를 활용하며 군정을 편 미군과는 달리 소련군은 民族主體勢力인 「인민공화국」을 거부한 대신 점령기구에 「인민위원회」라는 그럴듯한 옷을 입혔다. 그위에 김일성이라는 괴뢰를 앉혔다.

약관33세의 소련군 陸軍小佐 김성주(金成柱)가 「김일성(金日成)장군」으로서 평양시 민들에게 소개된 것은, 소련 軍司令官 스티코프대장이 김일성의 손아귀에 쥐어주기 위한 「保安隊」의 조직을 「인민위원회」에 指令한 다음다음날인 1945년 10월 14일이었다. 그해 11월초 약2천명의 보안대가 편성됐고 그 지휘자로 김일성이 소련군에 의해 선정됐다. 김일성은 귀국하기전까지 소련의 「特別情察要員」이었기 때문에 당시 소련의 제 2 인자였던 비밀경찰 두목 베리아가 김을 朝鮮占領政策遂行에 알맞는 인물로 指目했는지도 모른다는 설이 있다.²⁾

김일성 장악하의 보안대는 1946년 8월 15일 「保安幹部訓練大隊部」로서 7천여명의 兵力을 확보했고 46년 9월에는 6만명의 대부대로 성장했다. 이것을 모태로 1948년 2월 8일 「북조선인민군」이 탄생했으며 그 最高司令官에 김일성, 민족보위상(국방장관)이 최용건(崔傭健), 문화부사령관(정치위원)에 김일(金一). 참모총장 안길(安吉), 포병사

1)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神話と現實」玉城素 P.72.

2) 「北朝鮮軍事史…超軍事國家」塚本勝一 P.8.

령관 무정(武亭)등을 앉혔다.

이리하여 김일성이 주도하는 조선노동당 중심의 강력한 정치권력이 38선 이북에 등장한 것이며 이는 남한보다 실질적으로 앞선 單獨政權의 樹立이었다. 表面上으로는 「조선인민군」이 창설된지 7개월후인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성립됐지만 실제로는 1945년 해방직후부터 북한만의 단독정권이 용의주도하게 조직되었던 것이다.

대한민국은 38선 이북에 태동하는 강력한 군사력 공산주의정권에 위협을 느낀 나머지 한반도의 赤化沮止를 위해 서둘러 등장시킨 안티 테제이다. 앞서 「대한민국은 그 창건과정부터 적극적 의미의 국가목표를 설정했다기보다 소극적이고 受動的인 출발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것은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였다.

잠시 그 經緯를 살펴보자. 1946년 1월 16일부터 개최됐던 미·소공동위원회는 1947년 10월 18일 제6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성과없이 끝났다. 1946년 12월의 모스크바3상(相)회의 결정 즉 「朝鮮의 信託統治案」의 실행을 주장하는 소련측에 대해 당시의 미국 무장관 마샬은 그해 9월 17일 한국문제의 유엔상정을 요청했다.

소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샬제안은 9월 21일 유엔총회 운영위원회 討議事項에 插入하도록 건의할 것이 가결되고 24일 총회에서 審議한 것이 41대6으로 可決되었다. 미국은 조선문제의 총회제출과 아울러 信託條項削除를 主張함으로써 모스크바協定の 폐기와 조선문제의 現地協定을 단념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1948년 1월2일 유엔한국위원단이 來韓했다. 유엔한위는 엘살바돌, 중화민국, 호주, 시리아, 프랑스, 인도, 필리핀, 미국, 소비에트 및 우크라이나 등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① 48년 3월중에 總選 ② 國會構成 ③ 새로 수립될 정부와 유엔위원단의 협의하에 軍政으로부터 정권을 인수케 한다. 占領軍은 90일이내에 완전철수한다는 것등을 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점령군은 물론 남북한에 주둔중이던 미군과 소련군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1948년 1월 12일 서울 德壽宮에서 제 1 차회의가 열렸다. 하지만 소련은 이 회의에서

3) 「解放二十年史」 李丙燾 P.266.

참가를 거부하였고, 북한당국은 유엔위원단의 38선월경을 拒絶하였다. 당시 「朝鮮中央人民委員會」委員長이던 김일성은 1월 9일 平壤에서 群衆을 動員한 한 集會에서 유엔한위의 38선월경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우크라이나대표는 派遣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유엔한위는 1948년 1월 12일 서울 德壽宮에서 그 역사적인 첫 회의를 열었다. 소련은 1월 22일 유엔에서 外相代理 그로미코를 통하여 유엔한위의 入北拒絶을 정식으로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한위는 「선거가 가능한 지역(38선이남)에서만」의 總選을 실시토록 했다. 1948년 5월 10일의 총선은 그렇게 실시되었고 國會議 구성과 憲法의 制定·公布 政府樹立이 그 뒤를 이어 이루어진 것이다.

그후 유엔은 12월 12일에 대한민국정부를 承認하고 대한민국을 「한국내의 유일합법정부」임을 결의로서 인정했다. 따라서 북한에 이미 존재한 소련조종하의 정치권력은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不法集團이 되고 말았다.

「민족해방의 기치를 내걸고 실제로는 민족의 分裂을 劃策한 김일성과 그 조종자인 소련당국은 그들의 음모를 정당화 시키기 위해 그들만이 민족통일을 지향하고 그 반대 세력은 통일을 반대하는 美帝의 괴뢰라고 反復主張하기 시작했다. 그러한 주장들은 「민족해방」과 「조국통일」로 단순화된 口號를 내세워 大衆의 지지를 호소했으며 실제로 그 효과도 있었다.

대한민국정부수립직후인 1948년 10월 20일 전라남도 麗水에 주둔한 국군 제14연대의 武器庫를 占領함으로써 일어난 여수·순천반란은 「인민해방」의 미명아래 살륙이 자행되었다. 그해 11월 중순에는 오대산 깊숙이 침투한 공산당 빨치산 수백명이 강원도의 雉岳山, 경기도의 용문산을 거쳐 태백·소백산과 지리산 遊擊隊와 合流, 暴動을 일으켰다.

대한민국이 그 憲法前文에서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막연히 결의한 것과는 달리 북한은 그 정권수립과 함께 매우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였다.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성립되면서 김일성은 최고인민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북조선은 인민의 총의로 성립한 것이며 單一民主主義國家와 조국통일사업을 제 1 차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제 1 차적 목표는 「祖國統一事業」이며 이는 그후 41 년이 지난 오늘 변함이 없다. 「조국통일사업」은 북한의 一貫된 對南統一戰略이며 이에 對抗할 대한민국의 대북통일전략은 그때나 지금이나 부재한 것이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통일전략과 통일후의 국가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북한은 「조국통일사업」의 具體的인 實踐으로 1950년 6월 25일 武力南侵에 의한 赤化統一을 試圖했다. 당시 그들의 최종적인 정치적 목적은 「적의 격멸, 적의 정치적붕괴에 의한 승리」였다. 그런데 그 전쟁목적달성을 위해서는 미국을 군사적으로 괴멸시키지 않으면 안된다는 命題에 부딪혔다.

물론 中共軍의 介入으로 미군의 진격을 어느정도 沮止할 수는 있었지만 북한은 미군을 괴멸시킬 수는 없었다. 1951년 6월 소련을 통해 休戰을 提議한 것은 그때문이었고 1953년 7월에 휴전을 성립시킨 것은 전쟁의 企劃者 스탈린이 他界한지 수개월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스탈린이라는 확고한 後見人의 支援없이 전쟁목적달성을 할 자신이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북한은 그후 전략을 바꾸어야 했다. 그들은 미국과의 충돌을 지양하고 妥協을 模索해야 했던 것이다. 휴전성립후 북한은 一貫되게 「駐韓美軍撤收」와 「하나의 조선」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 「미군철수」와 「하나의 조선」은 서로 연결된 하나의 고리이다. 미군을 철수시킨 다음 미국과 타협(대화)해서 「하나의 조선」을 완성시켜보려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무력남침이나 對美타협이 모두다 스타일을 달리한 「조국통일사업」이라는 사실이다. 북한은 일견 「조국통일」을 무력남침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 같으나 실은 그보다도 미국과의 1대1 協商을 통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承認을 獲得하고자 하는 戰略을 숨기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그러한 전략에 비해 한국은 처음부터 최종적인 정치목적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였다. 대한민국정부의 성립도 북한의 정치권력강화에 대한 受動的, 防禦的 入場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또한 북한의 군사적 挑戰에 대해서도 한국의 指導部는 한국의 防衛를 위해 침략자를 격퇴한다는 것이 최소한의 정치목적이었다.

물론 한때 北進統一論도 있었지만 그것은 어차피 支援者인 미국의 保證과 承認이 없는 외마디소리같은 것에 불과했다. 그후 전쟁은 휴전이라는 이름의 교착상태로 40년 동안 굳어졌지만 북한이 의연 「조국통일사업」과 「하나의 조선」 전략을 堅持하고 있는데, 남한은 계속 受勢的 防禦的 入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대한민국은 계속 수세적, 방어적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인가. 아니면 적극적, 攻勢的 野心을 實現코자 하는 의지와 행동을 보일 것인가. 수세적, 방어적 입장에서 끝내 헤어나지 못할때 대한민국은 적극적, 공세적인 「조국통일사업」과 「하나의 조선」 전략에 말려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民族單位의 國家概念을 確立하고 그 국가의 이익이 무엇인가를 추구하여 장기적인 국가기본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첫째 자유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것이며 둘째 통일독립국가를 달성하는 것이고 셋째 국가의 繁榮을 追求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의 정치적, 군사전략적 主體力量의 培養과 함께 對內外的인 情勢 變化속에서 오는 衝激이나 위협에 伸縮, 대응하면서 효율적인 국가운영을 할수 있어야 하며, 그러기 위한 기준과 指標가 마련돼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국가전략이라는 것이다.

II. 狀況에 대한 認識

1. 統일의 沮害要因들

국가의 기본목표 즉 국가戰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체의 능력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하며 둘째로 주변과 세계에 대한 情勢評價가 있어야 할것이다. 分斷狀況下의 우리의 경우 국가전략은 통일실현까지의 短期的인것과 통일성취후를 내다보는 長期的인 것으로 나누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우선 분단을 克服하고 통일이 성취될때까지의 단기적인 전략에 국한해서 생각해보기로 한다. 분단상태에 있는 북한에 대한 남한의 입장(남한에 대한 북한의 입장도)은 흡스나 룯소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하나의 전쟁상태라고 하지 않을수가 없다.

1935년부터 1939년사이 제 3 제국은 서유럽제국과 소련 그 어느쪽과도 전쟁을 하지 않았지만 제 3 제국의 宣傳機關은 1939년 또는 1941년부터 開戰할것으로 보이는 나라들의 사상과 헌법에 대하여 이미 그무렵부터 宣傳攻勢를 펴고 있었다. 돌이켜보면 히틀러는 1935년 이래 外交와 전쟁준비를 同時進行的으로 실시하고 있었기때문에 유리한 조건하에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었다고 말할수가 있다.⁴⁾

이상은 제이몽 아롱의 견해인데 이는 그대로 1962년(북한노동당의 제 4 차대회에서 4 大軍事路線이 확정되던해)부터 현재까지의 북한의 정치전략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북한은 62년이후 전국토를 要塞化하고 전인민을 武裝化, 전군을 幹部化, 군의 현대화를 집중적으로 시도하면서 남쪽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反共政策을 포기하고 間諜侵透防止를 목적으로 한 國家保安法의 철폐를 요구해왔다. 김일성은 마치 히틀러가 「1935년 이래 외교와 전쟁준비를 동시진행적으로 실시」 했던것처럼 대남파괴와 전복이라는 최종목표달성을 위한 「외교와 전쟁준비를 동시진행」해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북한의 정치전략에 대해 대한민국은 어떠한 정치전략으로 임해야 할것인가.

4) 「Freiheit ohne Krieg?」Clausewitz-Gesellschaft編 「클라우제비츠의 정치적 개념」Raymond Aron

먼저 우리 자체의 능력에 대한 평가부터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우리능력에 대한 평가는 북한의 정치전략에 대한 對應能力的 평가인 동시에 통일을 沮害·制約하거나 促進시킬 수 있는 要素로서도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制約條件으로서의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우리힘으로 당장은 극복할 수 없지만, 긴 역사의 안목으로 볼때 언젠가는 극복할 수 있는 제약조건들과, 우리힘으로는 도저히 어쩔수 없는 제약조건들이 있다. 전자는 민족의 團합을 가로막고 있는 外來思想과 이에 바탕해서 構築된 制度등의 문제이고 후자는 한반도의 地政學的인 위치일 것 같다.

첫째 우리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외래사상 즉 이데올로기의 문제이다. 서양사회가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특히 금욕적인 기독교정신의 근간이 된 헤브라이즘에서 進化·發展됐듯이 동양각국은 儒佛思想의 영향을 많이 받아왔다. 민주주의나 資本主義 또는 마르크시즘이나 사회주의 사상은 대체로 기독교정신의 산물인 禁慾적 도덕주의와 合理主義를 기초로 하고 있다. 따라서 그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한 지도자들은 시민(브르조아지) 또는 노동자(프롤레타리아)와 같은 매스(대중)의 이익을 추구하게 마련이다.

그에 비해 유교나 불교사상은 지배자의 仁德이나 군주의 王道를 설교하고 因果應報 또는 輪廻說등 勸善徵惡을 강조함으로써 시민 또는 매스의 이익보다는 지배자중심의 권위주의문화를 형성케 하였다.

그와 같은 동·서양의 정신적, 문화적 차이는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충돌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1804년의 아편전쟁이나 1853년의 미국함대에 의한 일본에의 開放壓力 등이 그것이다. 불행히도 정면으로 맞서 싸웠던 중국은 좌절·패배했고 일본은 개방여부를 둘러싸고 國論이 分裂되기도 했지만 결국은 서양과 타협하는 길을 택해 損傷보다는 이득을 볼수 있었다.

그러나 두 경우 공통적이었던 것은 서구화 즉 근대화를 추구하는 것이었다. 여기서는 중국은 실패하고 일본은 성공했다. 왜 그랬을까.

중국과, 중국의 영향을 받아온 일본에게 공통적인, 또는 相異한 정치지배원리는 어떤것들이었나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공통적인 것은 君師父一體的인 철저한 位階秩序에 의한 조직의 운영이다. 그러나 중국에서의 位階秩序는 임금을 頂點으로 말

단관리까지의 官制는 있지만, 그것들은 서로 有機的으로 기능하지 못했다. 面從腹背거나 부패무능하기 일쑤여서 백성의 원망과 불신을 사기가 십상이었다. 그것은 광대한 국토에 수억인구가 흩어져 사는데도 임금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中央集權體制를 維持하려니까 관료기구가 일종의 동맥경화 현상을 일으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그에 비해 일본은, 멀리는 12~14세기(1185~1333년)의 가마쿠라(鎌倉)시대부터 가까이 1600년부터 1868년의 도쿠가와(德川)시대에 이르기까지 매우 細分된 봉건영주들과의 상호협조와 합의로 정치를 운영해왔다. 일본의 정치는 和를 중시했으며 합의를 원칙으로 한 것이다.

바꾸후(幕府)의 장인 쇼오군(將軍)을 정점으로 한 일본의 봉건영주제도는 중국에서 배운 士農工商제도를 援用했지만 중국이나 조선에서 이를 엄격한 세로(縱)형으로 운영하여 경직시킨 것과는 달리 일본인들은 이를 가로(橫) 운영함으로써 上下位階로서보다 각기 다른 役割分擔적 制度로 活用했다.

따라서 위·아래로 곧은, 경직화된 관료제도가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폐단은 없고 서로 補完하고 협조하는, 유연한 횡적 사회구조를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종적으로 경직된 사회에 비해 횡적으로 유연한 사회가 외래사상이나 風物을 받아들이는데도 훨씬 편했을 것이다.

『이데올로기나 종교의 이론은 일본인을 별로 흥분시킨 적이 없다. 아마도 섬나라라는 상황, 자연 또는 역사적 경험이 세계를 잘 만들어보자는 꿈을 키울만한 자극을 주지 않았을 것도 같다. 일본은 세계적인 宗教創始者나 위대한 철학자를 輩出하지 않았으며 유명한 외국의 이론가에 대해서도 그다지 경의를 표하지 아니한다.

대부분의 일본인에게 있어 인생의 중대한 문제를 정신적으로 극복하기보다는 오히려 실제적인 해결책이 문제인 것이다. 아무도 기독교의 가르침의 崇高함에 이의를 다는 것은 없지만 많은 일본인은 만약 추궁을 받는다면 진정한 기독교적 생활은 그들에게 있어 마음이 무거운, 꽤 버거운 일이라고 손을 들며 인정할 것이다. 그들은 불교는 받아들였다. 그것은 주로 불교가 일본에게 중국문화를 가져다준 때문인데다가 일본인은 그

스스로의 소박한 俗世의 필요성때문에 불교를 일본식으로 정리해 갔기 때문이다.

일본은 마르크스주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자연의 위력에 복종할 것을 터득하고 있는자, 스스로를 최고의 被造物, 즉 세계의 주인공으로서가 아니라 자연계의 일부로서 헤아릴 수 없을만한 생물속의 많은 존재의 일부로서밖에 이해하지 않는자는, 이데올로기적인 진리를 쉽게 믿지 않을 것이다... 칼 마르크스는 일본까지 오지 않았으며, 일본에서는 기독교가 요컨대 잘 안됐던거나 마찬가지로 마르크스주의도 성과없이 끝날 것이다. 현실주의자로서, 또한 실재가로서의 일본인은 모든 정신적인 理論構造를 信用하고 있지 않다. 모든 외국의 尺度가 쓸모없는 것은 그때문이다. 일본인은 그들의 척도에 의해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⁵⁾

引用이 길어졌지만 독일기자가 본 일본인의 이상과같은 측면은 일본이 결국 그들에게 필요한 精隨만을 잘 도려내어 스스로의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는다는 것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미국 유수의 일본연구가 마리우스젠슨은 이렇게도 말하고 있다. 『일본은 중국문화의 軌道에 있으면서도 중국문화섭취에 있어서는 종교·시·미술등만을 즐겨 받아들이고 그밖의 것은 일본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킨다는 선택을 계속 확보해왔다. 정치제도나 사회제도의 경우에는 일본에 導入이 되면 곧 중국의 原形을 알아볼 수 없을만큼 修正되어버리고 말았다. 일본은 문화적으로는 중국의 軌道에 놓여있었지만 정치적으로는 중국질서의 軌道에 한번도 놓인적이 없었다—』⁶⁾

우리는 일본처럼 외래사상의 精隨만을 교묘히 도려내어 스스로의 발전의 밑거름을 삼지 못했다. 그렇다고 중국처럼 국경을 넘은 汎世界的 普遍性을 자부하는 문화적, 사상적 가치를 갖고 있지도 못했다.

결국 남의것을 흉내내는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남의것을 되도록이면 원형 그대로 살리려고 노력했다. 漢字도 일본에서는 원음과는 상관없이 멋대로 붙여쓰는 訓讀을 하는데 비해 우리는 원음에 충실하고 있다. 불교나 유교도 일본에서는 그들

5) 「孤立する子大國日本」Gerhard Damborn P.37~38.

6) 「日本~二百年の變貌」M. B. Janson 如藤幹雄譯 P.15~16.

스스로의 國學에 흡입시켜 그 원형보다는 그들 편의대로 필요한 정수만 써먹고 교조적 원리에 집착하지 않는데 비해 우리는 고집스럽게 교조적 원리와 形骸的 원칙만을 중시 해왔다. 기독교나 마르크시즘도 마찬가지였다.

해방이후 우리가 것처럼 외래 이데올로기에 집착한 나머지 동족상잔의 비극까지 맛 보지 않으면 안되었다. 우리는 외래 이데올로기를 완전히 버리지는 못하더라도 그 속 박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행히도 한반도 남반부에만은 고질적 외래 이데올로기에의 집착은 없다. 그대신 남한은 무사상에서 벗어지는 정신적 혼돈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북한 사회에 패배한 김일성의 주체사상이 우리가 추구하는 내셔널리즘일 수는 없다.

우리는 지금 국토의 통일에 앞서 남북의 민족적 통합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민족적통합이란 결국 민족적 합의(National Consensus) 즉 내셔널리즘일 수밖에 없다.

내셔널리즘이란 무엇인가. 사전의 풀이로는 국가주의, 국민주의, 민족주의, 국수주의 등의 여러 뉘앙스가 있는 것으로 되어있다. 일본의 정치학자 마루야마(丸山眞男)는 한 나라의 통일·독립·발전을 지향하고 추진하는 이데올로기 및 운동이라고 정의하고, 그러나 내셔널리즘개념의 다양성은 내이션이라는 범주의 다양성 내지 애매성과도 상관있다고 덧붙이고 있다.⁷⁾

예컨대 내셔널리즘의 번역어로서 「국가주의」 「국민주의」 또는 「민족주의」등 다양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은 내이션이 국가라든가 국민 또는 민족이라는 여러 의미로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가란 일정한 영토와 인민과 그들에 대한 통치권을 갖는 나라(State)를 뜻하며 국민은 동일한 통치권아래 결집되어 국가를 조직하는 한 요소인 인민(People)이다. 또한 민족은 국가나 인민과도 전혀 다른 개념이다. 그것은 역사적 운명과 문화적 전통 그리고 언어를 함께 하는 기초적인 사회집단이다. 이는 State나 people은 아니고 race 즉 민족·종족등에 가장 가까운 개념이 된다.

요즘 한국에서 쓰이는 내셔널리즘은 대체로 제 3의(義) 즉 racialism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동시에 그것은 국토 또는 조국을 의미하는 Country와도 동의어로 쓰여지고 있

7) 「現代政治の思想と行動」丸山眞男 未來社

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조국애나 애국심등으로 번역되는 패트리오티즘(Patriotism)과도 같은 의미가 되어버린다.

그러나 내셔널리즘은 단순한 국가주의도 국민주의도 아니며 인민주의나 애국심만도 아니다. 패트리오티즘과 내셔널리즘은 중복되는 의미를 갖지만 똑같을 수는 없다. 전자는 「향토애」의 어감을 지니고 있다. 주로 자기가 낳고 거주하는 토지에 대한 집착과 애정을 중심으로 한다. 그 토지는 도시나 지방 내지는 나라이다. 그것은 반드시 통일국가일 것을 필수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미국·소련과 같은 다민족국가의 국민들. 그들은 그 애정의 대상인 토지의 확장이라는 욕구보다 오히려 그것을 방어하고 유지한다는 데 역점을 둔다.

이에 비해 내셔널리즘은 거주지에의 執着을 반드시 하지 않는다. 소련의 타시켄트나 미국 로스엔젤리스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이 그러하며 미국, 소련 또한 東歐등에는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그렇다. 일본인 중국인(華僑)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대체로 민족국가에의 집중, 통일 즉 자주독립의 민족국가의 형성을 지향하며, 국가 그자체에의 충성이 다른 여러가지 가치에의 충성을 否定하거나 자신에게 동일화 하는 경향을 보인다.⁸⁾

한국인은 패트리오티즘과 내셔널리즘을 겸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러면서도 한국인은 다른 어느나라 국민보다 국민적충의 또는 民族的合意面에서 약하다.

그러한 要素 즉 내셔날 콘센서스가 강한 나라일수록 民族的團合(National Unity 또는 National Solidarity)이 잘되어있다. 일본, 이스라엘이 그 좋은 예이다. 그러나 일본이나 이스라엘의 민족적 단합은 일반화 해서 말할수는 없다. 다만 그들의 독특한 내셔널리즘의 뿌리와 生成課程은 어떤것들인가를 살펴볼 필요는 있을것이다.

먼저 일본의 경우를 보자. 일본을 흔히, 아시아에서 唯一하게 성공한 민주주의국가니 또는, (아시아유일의 資本主義成功事例)라고들 한다. 그것은 어김없는 사실들이다. 다만 일본이 享有하는 정치적 민주주의나 경제적 자본주의는 모두다 西歐文明의 產物이며, 일본은 지난 1세기이상의 서구화과정을 거쳐 이제는 서구사회와 똑같은 정치

8) 「日本のナショナリズム」上山春平 至誠堂.

적·경제적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론의 여지가 없을수 없다.

서구화란 일반적으로 막스 베바가 말하는 「프로테스탄티즘의 倫理와 資本主義精神」과 같은 맥락에서 파악될수 있다. 그러나 프로테스탄티즘대신 「일본의 傳統」이라든가, 「유다야의 전통」이 자본주의정신과 결합될수도 있다. 즉, 「일본의 전통과 자본주의정신」이 일본의 서구화 즉 일본이 서구식 민주주의체제를 잘 採擇·消化하고 서구식 자본주의제도를 무난히 吸收·再生시킬수 있게 한 原動力이 되었다고 생각할수도 있는 것이다.

일본의 전통, 그것은 정치학적 용어로는 내셔널리즘인것이다. 앞서 지적한대로 쇼오궁 정치라고 하는 일본의 무가정치는 1185년에 미나모토노 요리도모(源賴朝)라는 쇼오궁이 가마쿠라에 바꾼 후 즉 장군에 의한 軍事統治體制를 확립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때부터 일본의 무사(武士)계급은 쇼오궁에게 충성을 다하는 일본특유의 군국주의적 봉건체제의 뿌리를 내리게 된것이다.

이 독특한 형태의 밀리터리즘은 이때부터 일본정치에 뿌리를 내리게 된것이다. 그후 아시카가(足利)의 무로마찌(室町=1333~1568년), 임진·정유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모모야마(桃山=1568~1600년), 도쿠가와(德川=1600~1868년), 메이지(明治=1868~1912년)시대와 제 2 차대전 이 끝난 1945년까지 군국주의적 병영국가체제를 유지해왔다. 일본은 자그마치 6백2년간의 밀리터리즘의 전통을 갖고 있으며, 특히 1868년의 근대화이후에는 近代的 군사제도 의 도입과 함께 군벌에 의한 정치 즉 군국주의가 판을 쳤다. 일본의 정치에서 표면적으로나마 그러한 밀리터리즘이 사라진것은 1945년 8·15의 패전 이후 짧은 기간에 불과하다.

그러면 것처럼 장구한 기간동안 일본의 밀리터리즘을 지탱시켜준 정시적 지주는 무엇이었나. 그것은 하마디로 일본특유의 神佛一體사상이라고 해도 무방할것같다. 일본인에게 있어 호도계(佛陀=부처)는 절대자이자 천지만물의 본질이며, 그 절대자로서의 부처가 일본땅에 남긴 모습이 바로 아끼쓰마가미(現御神) 즉 가미사마(神様)라는 것이다. 가미사마는 부처의 화신(化身)이며, 불도(佛道)와 신도(神道)를 합친 이정신은 일본의 민족종교이기도 하다.

전전(戰前)까지의 일본천황은 바로 아끼쓰미까미 또는 아라히도노가미(現人神)였고, 일본군대는 천황의 세끼시(赤字)로서 살고 죽어야 했다.

왜그런가. 일본의 가미사마는 山川樹木이며 우물이나 논밭이고, 바위나 폭포수이다. 가미사마는 자연그대로의 모습이며 바위나 산봉우리가 그대로 가미사마이다. 일본의 모든 가정, 촌락, 계곡들과 氏族들은 가미사마가 만들고 보호하는 대상들이다. 그중에서도 태양의 여신인 아마테라스 오오미까미(天照大神)가 수호하고 있는것이 천황과 그 가계로 되어있다. 아마테라스오오미까미는 국민을 지배하는 천황가를 창조하라는 神勅으로 자신의 손자를 땅위에 내려보냈다는 신화를 일본인들은 믿고 있다. 따라서 그 신의 위탁이 일본국가神道(戰後에는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가 구가되고 國敎이던 神道는 政敎分離로 형식상 국가와는 무관해졌다)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그 증거로 지금도 일본전국에는 전후 국가관리에서 민간 종교법인으로 탈바꿈한 神社本廳 산하에 신사 또는 신궁(神宮)이 17만여개소나 된다.

뿐만 아니라 각가정에는 가미다나(神棚)라 하여 가미사마를 모셔둔 가족단위 또는 기업이나 공장단위의 神殿을 비치해두고 있다. 따라서 지금도 일본의 신도신자는 총인구의 약6할인 8천여만명이나 되며 나머지 또는 그이상의 숫자가 불교신도이다. 일본인은 신사·신궁에서 결혼식을 올리며 장례는 반드시 절간에서 치룬다. 그대신 기독교는 신·구교 합쳐 1백만이 못된다.

일본의 천황은 일본민족이라는 집단의 統御神인 동시에 일본이라는 국토의 수호신인 것이다. 따라서 일본인에게 있어 그 국토와 민족과 천황과 자연은 모두다 同一創造過程에서 만들어진 것이며, 서로 떨어질수 없는 공동체로서 신도신앙을 형성하고 있다.

일본인에게 있어 천황은 정치적 신념따위를 초월한 존재인것이다. 패전 이전의 반체제파를 보아도 그 사상적 전향처랄까, 도피처를 미국 또는 공산주의와 같은 「外來의인 것」과는 無關한데서 찾았다.

그들은 구니(國=故郷)로 낙향하거나 가족 또는 궁극적으로는 천황과같은, 매우 토착적인데서 사상적 구원을 찾던가, 신사를 찾아 마음의 평온을 얻고자 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한국의 경우는 정반대다. 政變으로 쫓긴 金玉均에서 최근에는 유신당시의 金大中 또는 10·26이후의 金鍾泌등 자국에서 정치에 실패한 사람들이 일본 또는 미국으로의 망명의 길을 택한다. 나치스치하의 토마스 만을 비롯한 독일의 많은 반체제저항지식인들도 그랬다.

그만큼 일본인은 그들 내부의 사회주식 즉 가정, 학교 사회, 공장등의 조직에서 離脫해서 살수 없는 공동체의식을 강하게 갖고 있다. 일본의 문화인류학자 나카네(中根千枝)여사에 따르면 일본인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고 있는 規範의 체계 즉 일본내부의 사회질서는 「안(內)」과 「밖(外)」의 구별에 바탕하고 있다고 한다. 가정·학교 또는 회사와같은 하나의 단위 또는 조직의 안에서 공동으로 만드는 규범과 의무는 그 조직에 속한 모든 사람이 죽을때까지 지켜야 되는 의무이다. 그 하나 하나의 集大成같은것으로서, 일본인전체가 속한 단 하나의 집단이 일본민족이며, 이를 포괄하는 가장 중요한 공동체의 상징이 과거나 현재를 통해서 一貫하여 천황이라는 존재인것이다.

일본인의 구심점이 천황이듯이 이스라엘인들의 구심점은 시오니즘이란 유대인의 2천년에 걸친 流浪生活을 청산하고 聖書에서 말하는 「우유와 꿀이 흐르는 땅」, 잃어버린 조국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자는 실지회복과, 회복된 옛땅에 유대국가를 건설하자는 운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운동에 거역하는 모든 세력은 유대인의 적이며 적은 一掃되어야 이스라엘이 산다는 戰略이 성립된다.

또한 이스라엘을 생각할대 유대민족에 대한 유대교의 역할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대교는 신앙을 갖지 않은 개인까지도 구속한다. 유대교는 그가 유대교를 믿는지의 여부를 문제삼지 않는다. 중요한것은 그가 유대인인가 아닌가 하는 사실일뿐이다. 그가 만약 유대인이란면 유대교는 그 위에 君臨한다. 그것은 유대교가 민족보전의 종교이며, 신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는 종교라기 보다는 신과 민족과의 관계에 있는 종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대교는 언제나 國際主義를 적으로 하며 내셔널리즘을 사상적 기반으로 하고 있는것이다. 또한 이 종교는 유대민족을 신에 의해 選拔된 選民이라 하고 신이 그들에게 팔레스타인의 땅을 주었다고 생각해왔다. 유대인의 고난은 그들이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옴으로써 끝나는것으로 되어있었다.⁹⁾

일본에 있어서의 천황, 그리고 이스라엘의 시오니즘은 각기 그 나름의 내셔널리즘 또는 내셔널 콘세서스 형성의 근원을 이루고 있음을 본다. 그것들은 다분히 배타적이며 국제주의를 적으로 돌리는 안으로의 團合主義, 集團主義이며 그것은 국가주의·국주주의적임과 동시에 그 保全을 위해 군국주의나 군부독재주의가 合理化 될수도 있는 사상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내셔널리즘은 매우 부정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일본이나 이스라엘처럼 민족적 생존과 繁榮을 스스로 개척하지 않을 수 없는 孤立無援한 민족에게 있어 천황이나 시오니즘과같은 민족적 統合原理를 스스로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달리 민족보전의 길은 없을지도 모른다.

한민족에게는 천황이나 시오니즘은 없다. 지난 44년동안 한반도 북반부에서 김일성에 의한 人爲的인 神話와 이에 근거한 사상이 捏造되어 많은 사람들을 영향하거나 洗腦할수는 있었다. 하지만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인위적 신화와 사상은 그의 죽음과 함께 終熄될것이 뻔하다. 그것만으로 민족적 통합을 기하기에는 그 전통이 확립되지 않은데다가 스탈린이나 毛澤東의 死後 그들의 사상과 인위적 통치원리들이 턱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김일성이 만약 抗日遊擊隊의 抵抗精神이 투철했고 민족의 정신적 단합을 도출해낼만한 사상적 背景이 確固하며 그 자식에게 권력의 世襲을 試圖하지 않았던들 그는 최소한 중국의 孫文이나 베트남의 胡志明만한 국민적존경을 받았을지도 모른다. 손문과 모택동의 차이는 무엇인가. 손문도 모택동도 구체제의 非理를 타파하는 혁명을 주도하기는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그 두사람의 근본적 차이는 권력의 掌握過程과 그 행사의 차에서 발견할수 있을것이다.

손문과 모택동(또는 胡志明과 金日成)의 차이는 권력에의 執着도와 민주적통치자나 독재자냐에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것이다. 널리 알려진대로 손문은 왕조를 타도하고 공화제를 創設, 임시 대총통에 취임했으면서도 왕조측의 실력자(袁世凱)와의 교섭끝

9) *「ユダヤ國家とろラブリラ」應河陸一 草恩社

에 그에게 大權을 넘겨주는 大妥協을 이룬다. 그후 원세개는 정적을 숙청하고 독재체제를 확립하려 했지만 손문은 민족혁명을 성공시킨다.

반면, 모택동은 개인적 야심에 가득찬 權力至上主義者였다. 그는 그와 의견을 달리 하는 혁명동지들과 혹은 갈라지고(張國燾등) 혹은 숙청하면서(劉少奇등) 오로지 忠犬처럼 복종하는 동지(周恩來)만을 끝까지 휘하에 거느렸다. 그는 민주적인 합의보다 개인의 영향력확대에만 급급했다.

그점에 있어 김일성은 많이 닮은데가 있을뿐만 아니라 모택동조차 따르지 못할 희대의 鐵權獨裁者로서 그것도 모자라 자식에게까지 권력을 물려주려 하고 있다. 김일성은, 베트남의 호치명만도 못하다. 胡는 비록 무력으로 베트남을 통일했지만 반대자를 마구잡이로 숙청하지는 않았다. 그는 나라의 해방과 독립을 위해 초기에는 미국 또는 중화민국과의 협조를 했으며 후에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베트남의 구체적조건에 창조적으로 적용」하려했지만(공산)당내의 광범위한 민주주의의 달성, 자기비판과 상호비판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는 또 홍(紅=이데올로기)과 전(專=기술)의 훈련을 강조하는 實用主義者요 민주주의자였다.

따라서 손문이나 호치명은 외롭지가 않았다. 그들은 수많은 추종자와 지지자를 획득했고 끝내는 국부(國父)의 칭호를 받았다.

일본·이스라엘에 天皇과 시오니즘이하는 국민의 정신적 求心點이 있고 중국과 베트남에 이데올로기를 초월한 국민적 영웅이 있는것과는 달리, 우리나라에는 예나 지금이나 국민의 정신적 求心點도, 국민적 영웅도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로,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통일을 沮害하고 있다는 문제이다. 흔히 한반도는 地政學的으로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다고들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운명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음으로 어쩔수 없이 그 불리한 조건을 受動的으로 받아들일수밖에 없는가.

地政學上으로는 한국의 위치를 「중앙적위치」 또는 「변연(邊緣)지역(Rimland Countries)적 위치」의 두가지로 분류하여 한국의 국제정치상의 역할과 특징을 표현하고 있다.

중앙적위치라 함은 일반적으로 한 나라가 타국가들에 의해서 봉쇄된 위치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런 나라는 隣接國에 둘러쌓여져 제대로 勢力伸張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항상 自國防禦에 전신경을 집중해야만 하는 처지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중앙적 위치에 있는 국가라고 해서 모두 불리한것만은 아니다. 우수한 민족 즉, 求心力이 강한 국가일 경우에는 힘차게 밖으로 뻗어나갈수 있는 바탕이 됨으로 오히려 중앙적 위치가 유리한 조건이 될수도 있는것이다. 독일과 같은 나라는 과거에 중앙적 위치를 잘 이용할 수 있었던 국가의 하나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중앙적 위치의 利·不利의 문제는 국가의 求心力 여하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것이다. 구심력이 강한 국가는 중앙적 위치를 이용함으로써 그들의 세력권을 확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데 비해 약한 국가는 타국으로부터 侵犯 또는 위해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후자의 경우 독립국가로서 존속하기 어려운것이다.¹⁰⁾

한국은 중앙적 위치의 이점을 활용할 만큼의 국력을 保有하지 못했던것이 사실이었고, 중앙적 위치에서 隣接한 열강에게 계속 시달리다 보니 약해질수밖에 없었으며, 약하다 보니 더더욱 중앙적 위치의 해만 입게 되었다. 하여튼 한국은 과거에 있어서 중·일·소 3국이 그들의 生活領域 擴張을 위한 勢力線의 交叉點이었으며 세력 각축장인 동시에 地政學的 위험지대였던것이다.

邊緣地域이라는 말은 미국의 지정학자 니콜라스 스파이크맨(Nicholas J.Spykman)이 그의 邊緣地域說(Rimland Theory)에서 사용한 주제어로서 세계의 심장부지역 즉 Heartland를 둘러싸고 있는 도서국가를 제외한 유라시아 주변국가들을 가리켜 부른 용어이다.

한편 영국의 지정학자 할포드 맥킨더(Halford Mackinder)가 소위 심장부지역설(Heartland Theory)을 내놓으면서 「동유럽을 지배하는자, 심장부지역을 制霸할것ियो, 심장부지역을 制霸하는자 세계도(世界島)를 制霸할것이며, 세계도를 지배하는자는 마침내 전세계를 制霸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스파이크맨은 유라시아대륙의 실질적인 潛在力은 심장부지역에 있는것이 아니라 심장부지역을 둘러싼 國家帶 즉 邊緣地域에

10) Political-Geographical Appraisal of Divided Korea. Cha Yun, University of Washington, 1962.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변연지역국가들의 大陸勢力과 해양세력간에서의 緩衝地帶로서의 地政學的 역할도 또한 중시한 나머지 「邊緣地域을 지배하는자 유라시아를 지배하게 될것ियो, 유라시아를 지배하는자는 세계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것」이라고 했다.¹¹⁾

일본·중국·소련의 하나국에 대한 이익추구가 相衡하여 발생한 청일전쟁(1894~1895)과 러일전쟁(1904~1905)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그들 상호간의 충돌을 회피하고자 정책적으로 「중앙적위치」에 있는 弱小國을 독립국으로 인정한 예도 없지 않다. 1898년에 소련과 일본이 한국을 둘러싼 양세력의 충돌을 막기위해, 중앙에 위치한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자고 합의했던 것은 「중앙적위치」에 있는 한국의 완충국(Buffer State)으로서의 지정학적 기능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緩衝國으로서의 역할이란 국가적으로 그다지 자랑스러운 역할은 못되지만 한국의 경우 만일에 한국이 일·중·소 3국의 세력균형속에서 완충국으로서의 역할만 잘해왔던들 약소국이란 탈을 벗지는 못했을지언정 오늘날 우리가 겪고있는 국토양단이라는 뼈저린 비극만은 겪지 않고 견디었을런지 모른다.¹²⁾

어쨌든 우리는 먼 옛날부터 중국대륙의 정치·경제·문화적 軌道위에서 벗어날수 없었으며, 조선휘조말부터는 그러한 팩스 시나카시스템에 挑戰하는 러시아·일본등의 각축끝에 일본의 勝利의 결과로 그 지배를 피할수 없게 되었다. 그후 조선을 발판으로 한 일본이 중국대륙과 인도차이나반도를 거쳐 동남아시아와 서남아시아대륙까지 진출하는 과정에서 일본은 조선을 침략전쟁의 병참기지로 삼았다.

그리하여 일본은 1945년 8월 15일 영·미를 주축으로 한 연합국세력에 굴복할때까지 35년간 한반도를 완전무결하게 그 지배하에 두고 주물렀다. 그러나 일본의 막강한 군사력을 좌절시키는 한 방법으로서 미국과 소련은 「일본의 영토」였던 한반도를 분할점령하기로 약속하기에 이르렀다. 1945년 2월 4일부터 8일간 소련영토 크레미아(알타)에서 루즈벨트·스탈린·처칠등 미·소·영등 3개국 수뇌가 모여 제 2차세계대전의 전

11) 前渴書

12) 前渴書

후문제처리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반도의 分割占領은 약속된것이다.

그후 알타회담이라고 불리게 된 이 모임 직후(1945.2.12)에 발표된 코뮈니케는 공식적으로 5개항에 합의를 했다. 첫째 독일의 무조건항복과 戰後의 분할 점령 및 非軍事化政策, 둘째 유엔創設을 위한 샌프란시스코회의 4월 25일에 개최. 셋째 유럽해방지구에 관한 선언. 넷째 폴란드문제의 의결일치. 다섯째 프랑스의 강대국복귀(독일점령참가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등이었다.

그러나 5개항의 基本協約외에 하나의 중대한 秘密協定이 있었다. 그것은 「소련의 對日참전」약속이었다. 알타회담 5일째인 45년 2월 8일 미국의 루즈벨트와 소련의 스탈린은 秘密裡에 따로 만나 소련은 獨逸降伏후 2~3개월후에 參戰키로 약속한것이다. 극동의 일본군을 과대평가한 미국으로서는 소련의 對日參戰을 「따낸것」으로 알았던것이다.

스탈린은 參戰條件으로서 「소련의 대일참전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利權의 讓渡가 필요하다」고 했다는것이다.¹³⁾

그 조건이란 ① 외몽고의 현상유지 ② 러일전쟁에서 침해된 러시아의 옛 권리등의 회복(사할린남부와 인접제도의 반환, 大連港의 소련의 우선적이익옹호, 소련해군기지로서의 租借權회복, 東淸·南만주철도의 中소합병회사설립등) ③ 쿠릴열도의 반환등이었다. 이 과정에서 조선반도의 일본군 武裝解除를 소련이 맡겠다는 스탈린제안에 대해 루즈벨트가 미국과 함께 하자고 修正提議함으로써 그 부하들간에 협의끝에 38선 이북은 소련, 이남은 미국이 맡기로 했다.

그후 한반도의 분단이 固着되고 소련에 의해 북반부에 세워진 공산정권이 민족상잔의 전쟁을 挑發함으로써 이에 抵抗하는 남한과 이를 지원하는 自由陣營 사이의 열전과, 휴전에 의한 冷戰의 과정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로, 여기서는 생략키로 한다. 다만 맑스·레닌이라는 외래 이데올로기와 그로부터 援用된 프롤레타리아獨裁體制, 그리고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역사의 捏造을 거듭해서 만든 김일성의 주체사상등은 그를 創出해낸 중·소등 周邊勢力과 함께 의연 통일외의 妨害要素가 되고 있음을 인식할 필요

13) 「戰後國際政治史」①1944~1958. 柳澤英二郎, 現代 出版社.

가 있다.

최근에 이르러 미국은 점령군이며 소련군은 해방군이었다는 소련측의 정치心理戰用語가 그대로 남한학생들 사이에 의심의 여지조차 없이 사실처럼 믿어지고 있다. 그러한 현상은 우리 역사상 오랫동안 국민이 潛在的으로 회구해오던 민족공통의 이데올로기 또는 儒敎的習性에서 파생된 權威主義的 지도자를 김일성사상과 김일성이 대체해줌으로써 增幅된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광복후 교육수준과 민주적 의식수준이 높아진 한국민에게 있어 이데올로기나 개인숭배는 구시대의 유물로밖에 여겨지지 않고 있다. 이들에게는 이데올로기나 개인의 特出한 指導力量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될만한 여러가지 조건들이 갖추어져 있다.

우리가 그러한 조건들을 개발하고 유용하게 활용할 조정능력을 발전시켜나가기만 한다면 우리를 둘러싼 惡條件들 즉 국제환경이나 북한의 이데올로기등을 극복하고 새로운 민족적 콘센서스를 형성할수도 있을것이다.

2. 外的 영향으로부터의 탈피

앞에서 우리는 두가지 커다란 統一沮害要因들을 살펴보았다. 민족통합을 저해하는 제 1의 요인으로 外來思想 즉 외래의 이데올로기와 우리를 둘러싼 地政學的 요인 즉 국제환경을 생각해 보았다.

우리의 정신생활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활동 등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불교와 유교의 영향을 크게 받아왔다. 시기의 전후는 있을지언정 일본도 우리와 비슷한 儒·佛文化圈에 속해 있었다.

그런데 일본은, 앞서 마리우스 젠슨의 지적대로 「중국문화의 軌道에 있으면서도 중국문화 섭취에 있어서는 종교·시·미술등만을 즐겨 받아들이고 그밖의 것은 일본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킨다는 선택을 계속 확복해 왔던 것이다. 정치제도나 사회제도의 경우 일본에 導入이 되면 곧 중국의 原形은 알아볼 수 없을만큼 修正되어 버리고 만다. 이 말은 비단 중국의 원형뿐만 아니라, 20세기 이후 미국·영국·독일 등으로부터 들

어은 원형들도 마찬가지였다. 미국의 군용 무전기를 소형 트랜시스터로 개발한 것이나 맑시즘에서 배운 지식으로 教條的 制度를 만들기보다 그 사상적 원론을 참고로 자본주의를 발전시킨 것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그에 비해 한국은 예나 지금이나 외래사상에 지나치게 빠져버려 자기를 잃는 수가 허다하다. 예컨대 고려는 불교국가 다름 없었고 조선왕조는 유교국가라 해도 과언은 아니었다. 일본도 야마또(大和=300~710년)~나라(奈良=711~794년)~헤이안(平安=795~1185년)~가마구라(鎌倉=1186~1333년)~무로마찌(室町=1334~1568)~모모야마(桃山=1569~1600년)~도꾸가와(德川=1601~1868년)~메이지(明治=1868~1912년)식으로 정권과 시대는 많이 바뀌었다. 그러나 그들은 어느 정권·어느 시기에든 儒·佛 어느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상태에서 고유의 정치·사회제도와 문화를 발전시켰다.

그러면서도 일본인의 일상에서는 인도인이나 중국인이나 한국인보다 훨씬 더 많은 불교의 가르침을 履行하고 있다. 유교의 우등생은 한국이라고 한다. 그러나 중국인이나 한국인은 일본인만큼 유교의 가르침에 정통하지 못하다. 젠슨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20세기인 오늘날에도 대중소설을 읽자면 한시(漢詩)나 한문, 중국의 고사(故事), 역사 등에 어지간히 정통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에 놀란다——』

퇴계 이황은 당대의 碩學이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儒學者였다. 그러나 그의 학문은 일부 지식인이나 上層階級者들간의 傳有物이었을지언정 대중속에 뿌리를 내리게 한 지식의 供給은 못했다. 반면 이퇴계의 학문을 간접적으로 전수(傳授)받은 일본의 후지하라 세이까(藤原惺高)나 하야시 라상(林羅山) 등은 유학을 바탕으로 나라를 통치하는 규범을 도출해냈다. 그들 유학자를 늘 가까이 한 통치자 도꾸가와와는 그들로부터 개인의 행동양식을 엄격히 規制하는 規範들을 만들게 하였다. 이 규범들은 곧 지배계급의 엄격한 룰을 만들었고 백성들이 또한 따르게 만들었다. 오늘의 일본관료는 바로 그런 룰을 존중함으로써 부패·무능을 멀리하거나 경계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보다는 중국의 제도를 直輸入하여 무작정 흉내내기만 한 우리는 중국처럼 부패했

고 권위주의적 관료제도만 굳어버렸다. 科學제도 같은 것은 그 전형이었으며, 그 陋習은 지금까지도 전승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김일성체제도 마찬가지다. 맑시즘이나 레닌니즘은 어차피 외래사상이다. 김일성이 창조해 낸 것처럼 對內外的으로 과대선전중인 주체사상이라는 것도 한때 조선이 중국을 능가하는 「유교우등생」이었듯,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을 능가하는(?) 맹목적 프롤레타리아 독재주의의 한 변형에 불과한 것이다.

북한의 지배집단은 하루빨리 이 外來思想과 그로부터 派生된 김일성주체사상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 그리고 그 사상에만 바탕하고 의존해서 구축한 체제를 고수하기 위해 만들어낸 모든 장치들을 정리해야 한다.

예컨대 조선노동당의 강령 가운데 제 1 항과 정면으로 모순되는 제 2 항을 修正해야 한다. 조선노동당 강령 제 1 항은 「민주주의 조선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할 것」이라고 해 놓고, 제 2 항에서는 「인민공화국의 건설을 위하여 전조선적으로 主權을 “인민의 정권인 인민위원회의”에 넘기도록 할 것」에서 못박고 있다. 「민주주의 자주독립국가」에서 당이 미리 정해놓은 「인민의 정권」인 「인민위원회」에서 주권을 넘기라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벗어나는 一大矛盾이다.

또한 「朝鮮勞動黨 規約」 제32조와 제36조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위한 규약일뿐 민주주의라는 명분에는 맞지 않는다.

제32조는 다음과 같다.

「당의 기본조직은 세포임. 세포는 공장, 광산, 탄광, 鐵道, 리(농촌), 농장, 학교, 행정기관, 街頭, 기타 공공시설 등에 당원 5명으로부터 조직함.」

읽어보기만 해도 숨막히는 제도가 아닐 수 없다. 32조는 다음과 같이 이어진다.

「.....당원 20명부터 당세포는 당위원회를 선거하고 그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거함. 당원 1백명 이상되는 생산, 기업, 운수직장, 사무기관 혹은 리(농촌)에는 시(구역)군당부의 결정에 의하여 적당한 위편으로 초급당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밑에 과·계 혹은 고대별로 세포와 동등한 권한을 가진 分세포를 조직함.

조선로동당의 이 규약의 前提는 프롤레타리아 이외의 계급들을 모두 敵對視하고 打

倒對象으로 삼은데 있다. 이는 1848년에 칼 맑스와 프레드리히 엥겔스가 세상에 펴낸 「공산당선언」의 문귀에 충실한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공산당선언은 제 1 항 브르조아와 프롤레타리아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다. 자유민과 노예, 귀족과 평민, 領主와 農奴, 길드(같은 직종의 조합)의 주인과 직공 등 요컨대 억압하는 자와 억압받는 자는 항상 서로 對立하고, 때로는 숨어서, 때로는 공공연한 투쟁을 쉴새없이 전개해 왔다. 그리고 이 투쟁은 언제나 사회전체의 革命的 改造로 끝나던가, 아니면 서로 투쟁하는 계급들이 함께 쓸어지는 것으로 끝났다.』

여기에 사용된 「자유민과 노예」라든가 「귀족과 평민」 또는 「영주와 농노」 등의 계급은 이미 아무데도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共產黨宣言은 이미 死文化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 공산주의 체제속에서 공산당선언의 死文化를 제일먼저 입증한 사람은 유고슬라비아의 부통령을 역임한 밀로반질라스였을 것이다. 그는 1957년에 펴낸 「새 계급」에서 이렇게 갈파했다.

『소련이나 기타 공산주의 국가들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 지도자들(레닌·스탈린·트로츠키·부할린에 이르기까지)이 예기했던 바와는 전혀 다르게 나타났다. 그들은 「국가」는 빠른 속도로 시들어가고 민주주의는 강화될 거으로 알았다. 그러나 실제론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났다……1936년(소련방의) 새 헌법이 공포됐을 때 스탈린은 “착취계급은 없어졌다고 갈파했다. 자본주의와 그밖의 오랜 역사를 가진 계급들은 없어졌다. 하지만 과거 역사에 알려져 있지 않던 새 계급이 형성되었다……혁명은 혁명이 필요로 하는 세력과 지도층과 조직과 아이디어를 창출해냈다. 새 계급은 客觀的인 이유로, 그리고 새 지도자들의 희망과 기지와 행동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마치 농민사회에서 귀족이 생겨나고, 商人 또는 匠人사회에서 브르조아가 형성됐듯, 새 계급의 사회적 기원은 프롤레타리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¹⁴⁾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북한의 정치권력집단은 끊임없이 거듭된 숙청으로 除去한 프롤레타리아 이외의 모든 계급을 소멸시키면서 만든 새 계급이다. 外來의 사상 즉 맑스

14) The New Class, An Analysis of the Communist System by Milovan Djilas. P.41.

와 레닌의 사상을 빌어서 형성된 「새 계급」은 우리 나라 사람들의 고유의 사고방식, 언어 및 민족의 固有秩序를 파괴하고 말았다.

북한에 형성된 美風良俗을 모조리 깨어버렸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고래로부터 공통된 사회공동체 의식의 기원은 조상과 가족이다. 김일성주의자들은 김일성자신의 捏造된 혁명전통을 과시하기 위한 「위대한 가계」 이외의 모든 사람들의 家系를 파괴해 버렸다. 북한의 인민들은 유아시부터 託兒所에서 김일성사상을 학습해야 하고 결혼은 당의 승인과 주선으로만 가능하고, 당의 명에 따라 居住해야 하며, 국가가 정한 사상의 틀속에서만 교육이 가능하며, 당과 구가를 위해서만 삶의 보람을 느끼도록 강요된 북한에서 조상숭배나 가족간의 사랑은 무의미 해지고만 것이다.

언어는 당과 국가를 위한 述語 아니면 김일성 개인을 위한 궁중용어처럼 局限해서 사용되어 사상·예술·도덕에 관한 우리 고유의 말을 죽여버린지 오래이다. 북한의 새 계급은 또한 기존의 모든 가치관·종교·교육·商行爲·經濟秩序를 당과 국가의 소유로만 歸屬시킴으로써 사회전체의 발전은 물론 움직임조차 못하도록, 동맥경화현상을 불러 일으키고 말았다.

그들은 또 전주민을 核心階層 27%, 동요계층 22% 적대계층 51%의 3계층과 51개 부류로 분류하여 감시와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¹⁵⁾ 북한은 핵심계층 27%를 「새 계급」으로 형성 나머지를 일단 敵對時하는 정책을 基潮로 인민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북한이 스스로 엮어매어 놓은 쇠사슬들을 풀어야 한다. 그것들은 광복후 지난 44년간 異質化된 사고방식, 언어와 교육, 민족고유질서 등을 통합함으로써 풀릴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그것들을 푸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반드시 그 반대입장의 對抗的 手段으로만 풀려고 해서 안될 것이다. 그러자면 군사적 강제수단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남북한 상호간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찾아 그것을 점차로 충족시켜나가는 방법을 摸索해야 할 것이다.

남북한은 지금 서로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가. 남북한은 1948년 89월 15일 대한민

15) 「金日成의 野望」柴田穂 李元馥譯

국을, 같은해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각각 세우면서 어느쪽이 더 國利民福을 위해 보다 더 貢獻하는 가의 競爭을 벌여왔다. 양쪽은 모두 국가건설과 인민의 행복을 추구했다. 동시에 그들은 각기 추구한 「건설」과 「행복」을 지키기 위한 군비의 경쟁도 서둘렀다. 나라의 「건설」과 인민의 「행복」 그리고 그것들을 지키기 위한 軍備競爭은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다.

20년전까지만 해도 국가건설과 인민의 행복, 군비의 경쟁에 있어 북한은 남한보다 우세한 것으로 자타가 共認했다. 그러나 그후 60년대 후반부터 한국이 북한을 모든 부문에서 능가하기 시작했다.

북한은 휴전 이듬해인 1954년 이래 5차례의 경제계획을 실시해 왔다. 1954년부터 56년까지의 「戰後復舊3 個年計劃」을 비롯, 1957년부터 60년까지의 제 1 차 5개년 계획까지 북한은 대체로 남한을 앞섰다. 그런데 남한의 經濟成長率이 연 10%선을 넘긴 66년(前年比 12.7% 성장)부터 북한은 오히려 경제계획에 蹉跌이 생기기 시작했다. 67년에 완성하려던 북한의 7개년 경제계획이 3년 延長되어 70년에야 끝났던 것이다. 그나마 目標達成이 不振한듯 75년까지 발표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한국의 발전은 눈부신 성과를 보였다. 68년에는 11.3%, 69년에는 13.8%, 73년에 14.9%, 76년에는 15.1%의 成長率을 과시했다. 이무렵 한국의 개인소득은 7백65달러로 북한의 3백46달러의 2배 이상을 기록했다. 이러한 趨勢는 그후 오늘날까지 持續적으로 展開되는 가운데 남북한의 隔差는 현격하게 벌어지고 말았다. 여기서 그 차이를 논하고자 하지는 않겠다. 다만 북한은 지금 그 隔差를 좁힐 필요를 절실히 느끼면서도 이를 위한 能動的인 행동이 불가능한 상태일뿐이기에 그러한 북한을 어떻게 하면 움직이게 할 것인가를 摸索해 볼 필요를 느낀다.

3. 궁극적 통합을 위한 段階들

우리는 앞에서 우리가 처한 내외의 상황과 외적 영향으로부터의 脫皮를 생각해 보았다. 통일을 阻害하는 일종의 原因分析을 시도해 본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만족

통합의 具體的 方案이 떠오를 수는 없다.

남북한은 각기 다른 意圖로 體制를 굳혀왔다. 그 異質的인 두 체제는 해가 갈수록 統合과는 반대방향으로 踰달음치고 있다. 북한은 남한의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후퇴를 그들 방식의 통일을 위한 好條件들이 성숙하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남한은 동구의 개방과 소련의 글라스노스트 및 페레스트로이카를 김일성체제붕괴의 好機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현단계로서는 그 어느쪽도 실현의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여진다. 남한은 북한당국자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단순하지 않으며, 북한 또한 素朴한 자유민주주의 신봉자들의 기대에 副應할만한 유연한 체제가 아니다.

문제는 어느쪽이 더 목이 탄 나머지 먼저 우물을 파느냐에 있다.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때 목이 훨씬더 마른것은 북한이다. 1989년 현재의 북한의 GNP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알 수 없다.

남북한의 主要經濟指標를 보면 87년말 현재 GNP는 남한이 1천1백86억달러인데 비해 북한은 1백93억7천만달러로 6.1대1의 隔差를 보이고 있다. 개인소득은 남한의 2천8백26달러에 비해 북한이 9백36달러로 3대1이다.

흥미로운 것은 남북한의 財政規模와 군사비지출의 규모가 엇비슷하다는 점이다. 남한의 정부재정규모가 1백95억3천만달러인데 북한은 1백40억6천만달러이며, 군사비는 남한이 59억8천만달러, 북한은 42억2천만달러로 되어있다.

GNP에 대한 군사비지출비율은 남한이 5.0%, 북한이 21.8%이지만 남한은 해마다 下降趨勢를 보이고 있다. 88년에는 4.38%이다. 그러나 북한은 더이상 군사비를 지출할 수가 없다.

우선 북한의 GNP를 넉넉잡아 2백억달러로 쳤을 때 그중 軍事費가 약22%(약43억달러), 지난 7월의 平壤祝展에 投入된 直接投資額이 약24%(약47억달러)인데다가 아직 값싼 방법이 막연한 외채가 약51%(52억1천만달러)나 된다. 게다가 「세계제일」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대동강 하구의 남포갑문공사를 40억달러나 들여 했는데 하구의 河床이 높아져 그나마 돈이 더 들게 생겼다.

이밖에도 북한의 무역(남한의 8백80억에 비해 40억달러규모)이라든가 강철(남한의 1천8백54만대 4백80만t), TV(남한=1천2백48만대 북한=24만대)등에 있어 격차는 심하며 앞으로도 격차는 더욱 벌어질 전망이다.¹⁶⁾

발전설비용량에서 직물·식량작물생산에 이르기까지 남북한은 重化學工業에서 輕工業등 모든 분야에 걸쳐 나날이 그 차를 벌려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着手해야 할 것인가.

1989년 한해를 돌이켜 볼 때 우리는 4개의 남북회담을 거듭해왔다. 첫째로 5차례 거듭된 남북고위당국자 예비회담에서 북한측은 팀스피리트훈련중지, 출판물단속중지, 문익환·임수경등 密入北者 석방등 會談外的인 문제들을 거론, 회담을 공전시켰다. 그러나 한국측은 제 3 차회담에서 전에 없이 북한의 대남공산화전략을 포기하도록 강력히 주장했다. 우리는 이문제를 앞으로도 持續的으로 제기 함으로써 북한의 대남적대정책 포기를 끈질기게 요구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89년중 8차에 걸쳐 가장 많은 접촉기록을 남긴 남북적십자실무대표접촉. 여기서도 북한측은 문익환·임수경등 문제를 擧論하다가 제 4 차 접촉이후 뚝 끊기더니 11월 27일 제 7 차접촉에서 갑자기 혁명가극 「피바다」와 「꽃파는 처녀」의 公演을 강력히 요구함으로써 회담의 진전을 가로막았다.

셋째 남북체육회담. 이것도 5차의 접촉끝에 가장 어려워보이던 名稱·團旗·團歌등에 合議는 했으나 選手選拔·任員構成등은 아직도 千里·萬里길을 남겨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은 「단일팀구성」을 既定事實化 해놓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팀의 베이징 아시안게임에의 참가의 길을 막아놓으려는 음모를 감추어 오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회회담 準備接觸인데 이것도 11월 28일 9차접촉을 마지막으로 90년 1월 24일의 再會를 약속하고 말았다. 이는 그무렵에 발표될 한미연합훈련 팀스피리트 실시에 때맞추어 이를 핑계로 회담을 空轉시킬 북한측 음모의 결과였다.

이렇게 볼때 북한측으로서 현재 급히 추진하고 싶은 남북문제는 赤十字會談도, 체육

16) 中央日報 1989. 2.3. 「金剛山 등 合作개발계기로 본 北韓경제」

회담도, 국회회담도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가장 가능성 있는 회담은 정치·군사회담을 併行할 高位當局者 豫備會談이다. 한반도문제는 따지고 보면 군사적으로 교착됨으로써 발생한 문제며 따라서 군사문제의 해결이야말로 가장 긴박하지 않을 수가 없다. 結者解之인것이다. 북한으로서는 이문제의 해결을 가장 바라고 있을지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 남북고위당국자 예비회담 제 3 차회담에서 우리측이 북한에 대해 對南 共產化戰略의 포기를 요청한 것은 뒤늦게나마 잘한 일이다. 그러나 그에 그쳐서는 안된다. 북한은 89년 9월 28일 「남북한이 다같이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통일방안을 정립하기 위하여」 남북한의 「정부·정당·사회단체들」이 참석하는 「民族統一協商會議」를 개최하자고 제의했다.

요컨대 한국내부에는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제시한 정부외에도 각기 다른 주장들을 내세우고 있는 정당·사회단체들이 많음으로, 37%대통령의 盧泰愚정권 플러스 63%를 총망라해야 국민적총의가 될 것이며, 그러한 남한의 「국민적총의」를 1로 하고 북한의 통합된 「高麗聯邦制」를 또하나의 1로 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정부는 북한에 대해 완전한 1대1의 입장이 못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기에 말려들어서는 안된다. 그보다는 우리가 그들을 보다큰 하나의 틀로 끌어들여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결국 역사와 文化의 遺産을 共有하며 그것들을 앞으로 지속·발전시켜나갈 주체로서의 하나이며 이름붙이자면 그것은 「한민족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전단계로서 짚고 넘어가야 할것이 있다. 그것은 결국 남북한의 동맥경화를 불러 일으킨 군살빼기 운동일 수 밖에 없다.

앞에서 우리는 남북한의 주요경제지표 몇가지를 보면서 북한의 경제가 어떤 한계에 이르고 있음을 짐작했다. 우리는 여기서 1989년 12월 2·3양일간 地中海상의 몰타에서 이루어진 미·소간의 새로운 협력관계를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미국의 부시대통령은 몰타회담에서 소련의 고르바초프서기장에게 그가 추진중인 페레스트로이카가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련이 국제경제체제에 編入될 수 있는 方案을 미국이 積

極講究, 支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¹⁷⁾

이는 「알타에서 몰타로」라는 상징적인 캐치프레이즈가 의미하는대로 알타의 전후처리 약속이 독일과 한반도등에서 냉전체제로 발전된 이래 최초로 미소간에 이루어지는 세기적 協力關係라고 아니할 수 없다. 동시에 그것은 전후의 마샬플랜에 버금가는 劃期的인 협력관계라고도 할 수 있다. 다른 어떤 변수요인이 나타나지 않는한 이는 세계평화를 정착시킬 하나의 새로운 밑물일 수도 있다.

이러한 구도가 한반도에도 중첩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접착으로서 남북고위당국자 예비접촉을 들 수 있다. 우리는 이 窓口를 통해 북한에게, 부시가 고르바초프에게 밝힌것과 비슷한 제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는 두가지 前提條件이 충족돼야 한다. 그 하나는 북한자체의 변화이며 다른 하나는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를 위해 劃期的인 軍縮을 감행했듯 북한이 軍축의 이니셔티브를 행사해야 하는 것이다.

부시는 고르바초프에게 「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도, 동서의 군사동맹을 정치군사동맹→정치동맹으로 단계적으로 병형하자는 고르바초프의 주장에 대해 나토(NATO)가 변질되려면 그 이전에 여러 軍縮措置들이 先行돼야 한다며 그때까지 미국은 나토를 강력하게 維持시켜야 할 책임을 지고 있다고 闡明했다.

우리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북한이 먼저 軍축을 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편의주의가 아니라 북한의 필요에 의한 하나의 시대적 要請인 것이다. 남북한은 어차피 살아야 한다. 각각 살되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이다.

남북한이 우선 이 平和共存이라는 大命題에 승복해야 하는 것이다. 북한은 말할 것이다. 남한에 軍부독재정권이 있고 그것을 지원하는 미제국주의군대가 그곳에 계속 주둔하고 있는한 통일은 논의조차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그러나 남한쪽에서는 다음과 같은 우려를 할 것이다.

첫째 북한은 인공위성으로도 그 공격의도를 측정할 수 없는 가공할 攻撃用 部隊와 武器들을 수도서울 북방 50Km지역에 集中配置하고 있다. 북한은 서울을 頂點으로 하

17) 東亞日報 1989.12.4「美蘇 새 협력시대선언」題下1면 머리기사.

고 문산·고랑포를 저변으로 하는 3각축 저변에 總兵力과 화력의 3분의1, 그 정면에 배치된 한국군 병력과 화력의 4배를 배치하고 있다.

둘째 북한은 7천8백여문의 야포 가운데 2천문을 자주포로 장비하고 있으며, 23개의 기계화보병여단과 12개 기갑여단, 1개 기갑사단, 1개 車輛化 步兵師團(약30만명)을 문산·고랑포 일대에 포진시키고 있다. 그 정면에 있는 한국군 兵力은 약4분의1, 화력은 자주포문수로 볼때 10분의1에도 못미치는 것이다.

셋째 북한은 대외적으로 3백만의 예비병력(勞農赤衛隊)을 갖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한국은 3백50만(예비군)을 保有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북한의 勞農赤衛隊는 動員할 필요없이 즉각 전투에 投入할 수 있는 완전무장한 전투병력인데 비해 남한의 예비군은 동원에 최소한 72시간을 요하며 동원후에 編成·指揮할 현역장교의 보충을 기다려야 비로소 가동할 수 있는 태세이다. 따라서 勞農赤衛隊는 현역 정규군을 그대로 보충할 능력을 갖춘 1만5천명편성의 전투 보병사단 2백개와 맞먹는다. 이렇게 볼때 북한은 실제로 54개의 현역 步兵戰鬥司團외에 2백개의 또다른 전투사단을 保有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소련육군과 맞먹는 가공할 병력이다. 이에 對抗할 수 있는 한국군사단은 46개사단뿐. 북한은 우리의 5·5배의 兵力과 10배에 달하는 자주포로 수도서울을 전격적으로 포위·점령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언제까지나 그대로放置해둘 수는 없다. 그것은 우리의 생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기 때문이기도 함과 동시에 북한자체의 생존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조속히 타파되어야 한다. 북한은 주한미군과 核武器가 그들에 대한 위협이라고 한다. 그리고 북한의 대변자들은 미군의 주둔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한국의 필요와 요청에 의해서가 아니라 미국의 世界戰略上的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도 말한다.

그 어느쪽이건간에 북한 또는 소련이 만약 한국 또는 미국에게 그러한 구실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어떨까. 예컨대 소련이 몽고주둔병력을 撤收시키고 中小國境地帶의 兵力을 減縮시킨 것처럼 沿海洲지역에 과잉·집중배치한 병력을 감축시킨다면 상황의 개

선을 위한 조건은 조성될 것이다.

똑같은 의미에서 북한이 만약 그 병력을 한국군과 엇비슷 한만큼 감축시키고, 그 화력을 현재의 절반정도로 축소시킴과 동시에 한국군에는 없는 전격적 攻擊用 部隊인 기갑여단과 기계화 歩兵旅團들을 최소한 서부전선에서만이라도 撤收시켜준다면 북한에 대한 남한의 신뢰는 構築될 것이다.

그와같은 노력과 함께 북한이 만약 1962년 12월의 제 4 차노동당대회에서 채택한 4대 군사노선의 포기를 宣言하거나 최소한 전인민의 무장화, 전국도의 要塞化政策만이라도 포기한다면 우리의 북한에 대한 신뢰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또한 노동적위대의 對南敵對態勢를 緩和하고 그들에게 개인의 자유를 허용하고 평화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면 남한은 북한의 그러한 노력들을 고르바초프의 신사고나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 이상으로 높이 評價할 것이다.

그같은 모든 措置 또는 일부라도 실행에 옮겨지거나 최소한 그러한 용의표명이라도 있으면 남한당국은 당장 다음과 같은 對應措置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미국정부와 함께 주한미군 撤收를 위한 교섭을 벌일 것이다.

둘째 미국과 북한을 상대로 현행 휴전협정폐기를 위한 교섭과 協商을 벌임과 동시에 북한과 함께 새로운 남북한 평화장치의 摸索을 위한 협상을 전개할 것이다.

셋째 남북한간의 전쟁상태終結을 선언하고, 離散家族들의 往來를 許容하고 경제·文化交流를 활발히 전개한다.

남북한의 군축이 그 모든 조치들에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다만 군축이건, 군축이 이루어진 다음에 취해져야 할 諸般措置들은, 소련과 東歐諸國에서 그랬던것처럼 複數政黨제도와 자유선거가 인정되는 새로운 체제의 登場없이 기대할수는 없을 것이다.

Ⅲ. 남북한이 합의해야 할 國家戰略

지금 우리는 조심스럽게 1990년대를 맞이하고 있다. 우리는 특히 90년 10월로 예정된 북한의 「노동당 제 7 차대회」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북한은 아마도 당規約·綱領등을 改正할지 모른다. 45년간의 김일성체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김일성일체제를 어떻게 확립할것인지도 관심사이다.

우리로서는 북한사회가 어느모로든 변화하기를 희망한다. 북한이 만약 변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우리와의 대화나 協商이 훨씬더 부드러워질것이며, 적어도 현재이상 더 나은 조건이 형성되지는 않을것이다.

다만 현재와같은 철저한 폐쇄상태에서는 통일문제의 어떠한 實質討議나 남북간의 多角的 交流를 기대할수 없다. 또한 현재로서는 김일성주의내부에서의 改革의 조짐이나 어떠한 動因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현단계에서 남북문제를 풀기위한 한국측의 과제는 한국사회 내부의 모든 부문에서의 진정한 민주화의 실현과 이에 바탕한 持續的인 繁榮밖에 없을것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브르조아의 퇴폐풍습의 流入을 방지하기 위해 개혁을 머뭇거리고 개방의 문을 열지 않으면서 「우리방식대로 살자」는 북한도 東獨처럼 어느날 갑자기 문을 열게 될지도 모른다. 물론 그 전단계조치들이 필요하다는것은 앞에서 지적한대로이다.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남한만이 아니라 북한에서도 합의할수 있는 국민적 합의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우리는 지금 그러한 합의(consensus)형성을 위한 好奇를 갖고 있다. 국토분단과 영토·인구 자원 및 활동영역의 심각한 제약, 그리고 사회내부의 對立·葛藤으로 인한 國力運用上의 制約, 또한 강대국영향을 脫皮하기 힘든 地理的制約 등이 없는것은 아니다.

반면, 우리에게는 그러한 제약들을 극복할만한 유리한 조건들도 없지 않다. 유구한 역사가 남긴 민족의 전통과 文化遺産들이 그것이다. 우리 민족은 강인한 기백과 끈질긴 底力이 있으며 변화에의 적응력이 풍부함은 역사가 증명하는 바이다. 또한 우리 민

족은 어딜가나 어떠한 상황에서나 민족공동운명체의식을 잃은적이 없으며 강대국의 세력이 거셀수록 이에대한 反撥과 克服의 경험을 갖고 있다. 30만5천의 수(隋)군을 격퇴하여 불과 2천7백여명만 살려보낸 을지문덕(乙支文德)장군이나 거란(契丹)의 10만대군을 전멸한 강감찬(姜邯贊)장군의 위업은 우리민족의 그러한 저력을 증명하고 있다.

다만 민족의 그러한 역량을 그때마다 살리지 못한 정치의 빈곤이 나라를 곤경에 빠뜨리곤 했던 흠이 지적될수는 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은 무지몽매한 대중위에 군림하는 專制主義體制하에서 있었던것이다.

우리는 지난 수십년간 풍부한 고급인력의 大量確保로 國運上昇의 기틀을 잡았다. 이제 21세기의 문턱인 90년대는 그러한 기틀을 발판으로 제 2의 跳躍을 試圖할 때라고 본다.

국민은 발전에의 신념과 자신에 차있으며 이는 「한민족주의」와같은 새로운 내셔널리즘의 高揚을 예견케 한다. 일견 「한민족주의」와 같은 내셔널리즘은 자유민주주의 정착과 矛盾되는듯도 하지만, 약간의 均衡者的 역할을 기하는 것이기때문에 상호모순되지 않는다.

均衡者的 役割을 하기위한 방법으로서 미국·일본은 물론 소련·중국을 포함한 지역경제권을 형성할수도 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북한의 참여를 불가피하게 만들수 있음과 동시에 선·후진국가간에 橋梁的 役割을 맡을수도 있을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는 대륙과 海洋으로부터 협공을 받아왔다. 따라서 우리는 大陸 아니면 海洋 그어느쪽의 강대세력에 편들지 않으면 살수가 없었다. 주변세력은 또 우리의 그러한 立地를 惡用해서 분할 통치(divide and rule)를 시도했으며 그로 말미암아 민족내부의 분열도 거듭되었다. 지금 우리가 直面하고 있는 남북민족의 양분상태, 한국내부의 갈등과 對立은 모두가 그러한 여파로 생겨난 현상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조만간 그러한 현상을 극복할수 있을것이다. 海洋勢力인 미국·일본과는 傳統的인 同盟關係를 維持하면서 중국·소련등 대륙세력과의 友好關係를 발전시켜 나갈수 있다면 우리는 地政學的으로 불리한 「중앙적위치」를 역전시켜 균형자적 역할을 함으로써 유리하게 활용할수 있을것이다

그리하여 김일성→김정일체제 이후 또는 그전에라도 북한이 개방→자유화 됨으로써 나라의 통일의 전망이 밝아지고, 궁극적으로 통일의 과정을 밝게 됐을때 그 과정에서의 국력의 낭비와 손실을 경계해야 하며 통일성취후에는 다음과같은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첫째 軍事·安保面에서 綜合的인 자위전력을 준비하는 한편 해양 및 대륙세력간의 勢力均衡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평화유지에 있어 세력균형론과 압도적 세력의 霸權에 의한 支配說이 있지만 한반도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사이의 세력을 緩衝시키는 역할을 하는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할것이다.

다만 스위스나 이스라엘에서 보는바와같이 능동적인 均衡者的 役割이 바람직스럽다. 즉 통일된 한반도는 주변국에 대한 軍事的 弱勢를 脫皮하고 적정군사력을 유지하며 때에 따라서는 군사적 협박이나 동갈에 대한 보복능력까지도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권에서 核心的, 主導的 役割을 堅持하면서 동시에 大陸 經濟圈의 주역을 맡을수가 있을것이다. 우리는 지난 반세기동안 해양문화와 그보다 훨씬 더 오랜 대륙문화의 폭넓은 蓄積이 있음으로 양지역의 경제를 主導하는데 가장 알맞은 위치에 놓여있다고 할만 하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국가기본목표는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한 통일성취와 그에 바탕한 독립의 유지발전과 번영이라고 할수 있다. 이 목표달성을 위해 우리는 평시에는 繁榮과 통일을 주전략으로 하고 생존전략을 支援戰略으로 삼고 위기시에는 생존전략으로 국력을 總動員하여 전쟁 또는 위기를 관리 스위스·이스라엘형 모델을 참고로 援用할 필요가 있을것같다.

요컨대 국가 대전략의 구상과 발전은 하나의 커다란 시대적 요구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현재와 미래의 국력사용의 效率化와 국가의 미래의 진로를 위해 必要不可決한 것이다.

문제는 남북한이 합의를 해야 한다. 우리는 21세기를 10년 앞두고 그안에 우리의 고질인 分裂과 葛藤과 抗爭의 역사에 終止符를 찍어야 하는것이다. 그러한 작업은 우리

시대 한국인에게 맡겨진 하나의 시대적 사명이기도 하다.

만약 우리가 이 好機를 활용해서 도약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상당기간동안 그러한 好機는 다시 찾아오지 않을런지도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 남북한간의 통일을 위한 합의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과제가 아닐수 없다. 우리는 지금부터 이 위대한 역사적과제풀이에 달려들어야 한다.

統一과 國家戰略

1989년 12월 일 인쇄

1989년 12월 일 발행

발행처 :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제 1 연구관실)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번지

정부종합청사 405호 ☎ 720-2141, 2425

간행책임 : 보좌관 사 순 문

인쇄소 : 정문사문화(주)

〈非賣品〉

